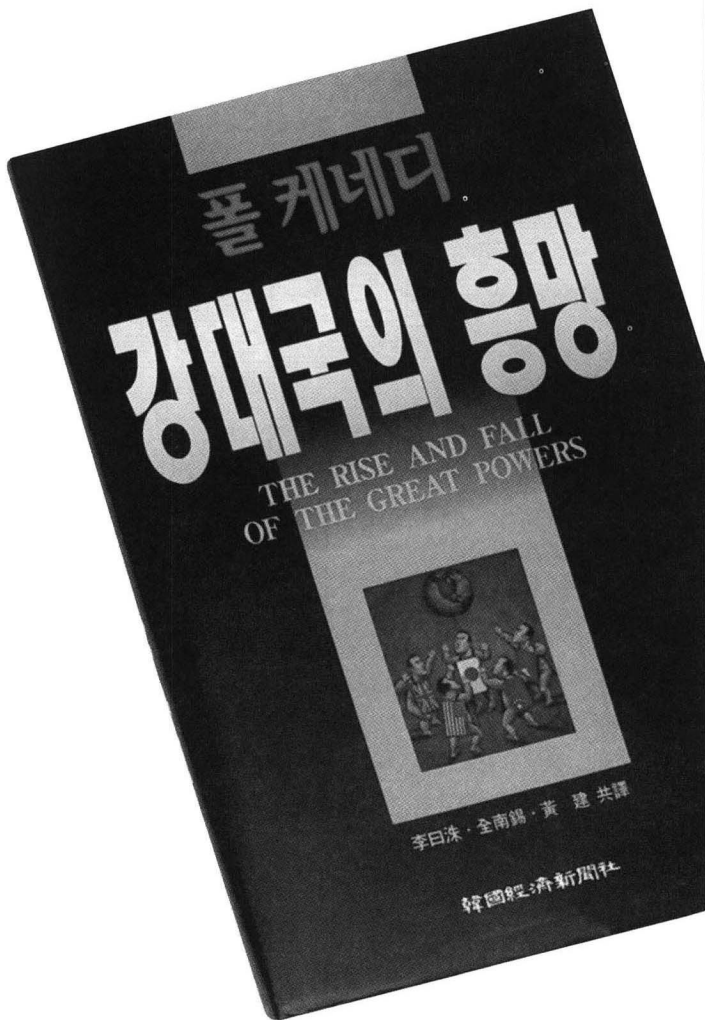


‘경제대국 대한민국’ 그 위상을 찾아서



《강대국의 흥망》 폴 케네디 지음 | 이월수 옮김 | 한국경제신문사 | 719쪽 | 값 16,000원

● 이 글을 쓴 최용식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년간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직장을 그만둔 뒤 30년 넘게 이 문제에 천착했다.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www.taeri.org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사상과 경제학의 위기》 《경제역적들이 들어라》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등이 있다.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를 ‘개방형 소규모 경제’라고 흔히 부른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진짜로 작은 규모의 경제일까? 우리나라가 과연 약소국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대국에 속한다.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778조 원으로서, 지난해 평균 환율로 환산하면 6,800억 달러에 이른다. 이것은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경제규모다. 세계에는 200여 개의 나라들이 있고 그 중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경제대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우리가 선진국이자 경제대국의 하나로 알고 있는 호주나 네덜란드, 그리고 한때 초강대국이었고 과학기술 수준은 아직 세계 최강에 속하는 러시아 등도 우리나라보다는 경제규모가 작다. 또한 인구 10억의 인도, 1억이 넘는 멕시코, 1억 8,000만 명의 브라질 등도 우리나라보다는 경제규모가 작다. 더욱이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약 7,800억 달러에 이른다. 이것은 유럽의 스페인과 비슷한 규모이고, 세계 경제 강대국들의 모임인 G7회의 멤버인 캐나다보다도 더 큰 규모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개방형 소규모 경제’라고 부르는 것은 지나친 겸손이라고 해야 한다. 아니, 자기비하가 너무 심하다고 해야 한다.

실제로도 우리나라를 ‘소규모 경제’라고 부르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경제 강대국’이라고 부러워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세계무대에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찾아야 할 때이다. 아울러 강대국으로서 우리 경제가 장차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모색해 봐야 할 때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꼭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 하나 있다. 폴 케네디가 지은 《강대국의 흥망》이 그것이다.

이 책은 세계적인 강대국들의 전쟁사 및 외교사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정치적인 성격이 짙다. 그러나 다른 정치적인 서적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면도 있다. 즉 경제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 책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강대국의 쟁패에 있어서 세력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경제가 발전해야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또한 군사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경제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이런 경우에는 강대국의 쟁패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이

런 모든 점들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경제학적 배움을 하나 더 얻었다. 참여정부가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인데, 이것은 현 경제학 책에는 없는 명제이다. 성장과 분배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 경제학계의 인식이다. 필자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네준 명제인 셈이다.

필자가 이 책에서 어떤 중요한 배움을 얻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분배가 점진적으로나마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 소득 상위계층은 소비성향이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연간소득이 1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소비성향이 40퍼센트 전후에 불과할 정도이다. 따라서 소득이 상위계층으로 더 많이 이동해간다면, 다시 말해서 빈부격차가 점점 더 확대된다면, 국가경제에는 유효수요가 부족해지고 소비가 줄어들며 이에 따라 경기는 하강하지 않을 수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공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점은 이미 오래 전에 케인즈가 갈파한 바이기도 하다.

빈부격차의 완화는 안정적인 성장의 전제조건인 셈이다. 그런데 빈부격차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에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안정적인 성장이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다른 어떤 소득재분배정책보다 훨씬 크다고 해야 할 정도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실업률이 떨어지고 임금상승률은 높아지며, 임금상승률이 높아지면 빈부격차는 당연히 완화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선진국 중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하는 것 역시 오랫동안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던 데에 기인한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성장은 분배의 개선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호소력이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것이 설득력을 발휘하기에는 분배의 중요성이 국민들 인식 속에 너무 깊게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무엇인가 더 나은 기제가 필요했었는데, 그것을 이 책이 필자에게 제공해 줬다.

우리나라가 성장을 멈추면 다른 나라가 우리 몫을 빼앗아가버린다는 역사적 현실이 그것이다. 다음 표는 이 책에 나

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한 것인데, 이런 사정을 결정적으로 증명한다.

1800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제조업생산 비중은 전 세계의 1/3에 달했으나 1900년에는 6.2퍼센트로 추락했다. 인도(파키스탄 포함)는 1800년에 19.7퍼센트에 이르렀으나, 1900년에는 1.7퍼센트에 불과하게 되는 결과를 빚었다. 불과 100년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영국을 포함한 유럽이나 미국의 제조업 생산량이 급증해서일까? 물론 이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1800년에는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의 1/8 정도에 불과했는데 1900년에는 영국이 중국보다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만약 중국이나 인도의 제조업생산량이 줄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해야 한다(영국이 가장 번영했다는 1800년대 초반부터 1830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2.7퍼센트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실제로도 그랬다. 동양의 제조업은 영국 등 서양제품의 경쟁력에 밀려서, 국내 시장에서조차 점점 고사를 당하는 처지였다. 시장을 서양에 빼앗겼던 것이다. 이것이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표〉 19세기 국가별 제조업생산 비중(%) 추이

구분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전체	미국	중국	인도
1800년대	4.3	3.5	4.2	28.1	0.8	33.3	19.7
1900년대	18.5	13.2	6.8	62.0	23.6	6.2	1.7

그 밖에도 더 많은 상식을 필자는 이 책에서 얻을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베토벤이 '영웅 교향곡'을 지어서 찬양했던 나폴레옹을 결국은 격렬하게 비난했던 배경도 뒤늦게 자세히 알게 되었다. 나폴레옹은 군사비용을 점령지에서 조달했고 그 과정에서 약탈이 흔하게 자행되었으며, 폴란드와 헝가리 등의 점령지 주민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나폴레옹 영웅전이나 개략적인 유럽의 역사책 등만 접한 필자로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학자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필자**